

2학기 학사운영 TF 발족... “학습권 보장 위해 만반의 노력”

김창호 기자 k.c_hox@khu.ac.kr

2학기 교육환경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교무처와 양 캠퍼스 총학 등으로 이뤄진 2학기 학사운영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28일 진행된 제 3차 등록금 반환회의에서 총학과 학교가 2학기 교육환경개선 안 논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학사운영 TF에는 양 캠퍼스 교무처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학사지원팀장, 총학생회장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회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7일이다. 주요 안건은 ▲서울·국제 공동 학자요구안 ▲e-campus 서버 문제 ▲단과대별 학사 대책 ▲피해사례처리 결과 점검 ▲유학생 학사대책 등이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회장은 “한 학기 동안의 회의 내용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 결과물”이라며 “모두 순서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0순위”라고 주요 안건 상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서울과 국제 두 총학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자요구안에 대한 것이다. 해당 요구안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수업 관련 학생민원창구 개설 ▲수업 관리 세부 지침 마련 ▲수업 인정 시간 상향 ▲비대면 플랫폼 개선 ▲강의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과제 부여 금지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동학자요구안은 지난 학기 느꼈던 비효율과 학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물리적으로 캠퍼스가 나뉘는 탓에 발생하는 학사 결정의 엇박자를 막자는 취지다. 양 회장 또한 “학사 운영은 양 캠퍼스의 공동사안인 만큼 공동학자요구안을 통한 논의에서 학교와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두 총학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학생 의견의 반영’이다. 이는 지난 학기 발생한 학사문제 해결에 있어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다. 최 회장은 “선택적 P/NP 도입, 기말고사 대면 원칙 철회 등에 대한 논란을 겪으며 지금까지의 논의 방식에 한계를 느꼈다”며 “1학기 미흡했던 부분을 위주로 안건을 선

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총학은 학자요구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총학에 따르면, 학교 측은 수업 관련 민원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조항에 대해 부담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창구가 홈페이지에 위치한 것이 교강사와 교직원에게 큰 업무 부담이 될 수 있고, 내용과 근거가 불분명한 중구난방식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까닭에서다. 이에 총학은 자신들이 대신 민원을 수집해 요약본을 전달하면, 학교가 이를 후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본부가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세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의계획서에 기재된 과제 이외의 부여 금지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교수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회장은 “무분별한 과제를 규제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기보다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다. 양 회장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수업의 질적 향상과 학습권 보장이라는 결론은 같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습권 보장의 체계화와 규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 또한 “과도기에 다소 입장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학교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총학생회는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가 가시화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안건들도 존재한다. e-campus 서버 문제와 피해사례 처리결과 점검과 관련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e-campus 서버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 1일이다. 서버 다운으로 약 8시간 동안 서버 접속이 지연되면서 학교 수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사용 인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 현재는 서버 증설 등을 통해 안정화가 이뤄진 상태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최대 동시접속 가능인원인 15,000명의 절반 수



2학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지속 가능한 개선 필요, 학교와 학생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준으로 동시접속자 수를 유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빠른 조치와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사례 처리 경과를 점검하는 것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난 학기 총학생회가 수집했던 ‘수업 피해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분명하지 못했다”며 “학교 측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피해사례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구체적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과대학별로 발생하는 학사 문제는 각 캠퍼스별로 해결될 전망이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준하 주임은 “공통사항은 본부 논의 후 대학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학별 특이사항은 해당 대학별로 따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회장은 단과대별 문제 중 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은 ‘실험·실습·실기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양 회장은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비대면 수업진행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부분 대면 수업, 또는 집중이수제를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 또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소규모 대면 수업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교무처 관계자 또한 “TF 회의를 통해 해당사항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면 비대면 수업이 시행 중인 10월 4

일 이후의 수업 방식은 21일 대책회의를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유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점도 하두에 올랐다. 교무처 관계자는 “입국이 불가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방식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학기와 동일하게 비대면 평가를 통해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회장은 성적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대면 시험이 불가했던 학생들에게 낮은 성적을 부여하는 등 다수의 피해사례가 조사되었다”며 “대면이 불가한 학생들이 피치 못할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사공지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 학사공지 창구로 쓰일 예정이던 ‘경희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는 번역본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 유학생들이 학사 공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측은 “TF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학사운영 TF는 ‘10월 4일 이후의 수업 방식’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양 회장 역시 “학습권 보장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간의 괴리감을 줄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사례를 줄여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묵묵히 노력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